

여야 정치협상회의 이르면 내일 첫 만남

정치·사법개혁안 고공 협상...원내대표단 3+3회의 사법개혁안 이르면 내달말 본회의...공수처 등 진통 예고

여야가 파스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을 다루기 위해 '고공 협상'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연이어 열린 대규모 집회 등 '여의도 정치'는 사라지고 '광장 정치'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거세지자 여야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정치협상회의는 이르면 10일 처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문 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13일 이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인 10~12일 사이 첫 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당 대표 단위의 정치협상회의와 함께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단위의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 주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관련 의원들로 구성된 '3+3'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장 급한 것은 사법개혁안이다. 정치개혁안은 다음달 말 본회의에 올라가지만, 사법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사법개혁안 본회의의 상정 시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분분해 이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한다.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로 변경됐는데, 법사위에서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을 채운 뒤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더 거쳐야 하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법안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사법개혁안 본회의의 부의 시점은 이달 말에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더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해석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을 자문 등을 통해 이 문제 해법을 고민하겠지만,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세부 논의 과정에서도 협로가 예상된다.

공수처의 경우 여야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파스트랙 법안대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육상육 조직'이라며 '설치 절대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기형적인 현재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정도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 각론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

'디플레' 우려 목소리

물가 상승률 두달 연속 마이너스 한은 국감... "시장과 소통 늘려야"

여야 의원들은 8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운영석 의원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작년보다 경제성장률도 훨씬 낮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저효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디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막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주의 원 역시 "지금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 저물가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이라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현 금감원장 국감 선서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부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파렴치한 여상규, 법사위원장서 내려오라"

파스트랙 수사 검찰 외압·육설 국회 윤리위 제소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8일 여야 원내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 여상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검찰의 파스트랙 수사 관련 "정치적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불렀다.

여 의원은 파스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김중민 의원을 향해 "웃기지 마. XX 같은 게"라고 육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여 의원과 문 대통령 지대 발언을 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의원의 발언을 거론, "국감장에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육설까지 했는데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고스란히 반사해 돌려주겠다"며 "여 의원은 더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

원 원내대표는 당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메시지서에서 "여 법사위원장의 파스트랙 수사 언급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국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며 "여당은 제1야당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 의원이)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로 한 것 같다"며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

길 잃은 바른미래 비당권파

안철수 美 유학에 복귀 불투명...바른정당계 내부 불만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돌연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정계 복귀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홀로서기에 나선 비당권파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비당권파 진영에서는 안 전 의원의 복귀를 토대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탈당·장당 여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장,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안 전 의원을 향해 "후배로서 조언한다면 (국구 시점을 늦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건너뛰면 해외에서 객사할 것"이라며 "정계 은퇴는 아니고 정치 복귀를 할 텐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다 사라지고 될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해훈 의원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

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전 국민 의당) 대표는 문제가 정리된 후 쫓기마를 보내드리면 올 분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안철수 전 의원 측에서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당권파 진영의 변혁에 안철수계 의원 7명과 전 당직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전 의원에게 정치적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훈 의원의 이날 "쫓기마 발언"에 대해 "정치 입문 후 평탄한 길을 걷지 않고 험로를 걸어온 그에게 쫓기마를 운운한 발언은 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이런 발언은 함께 모여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美 유학에 복귀 불투명...바른정당계 내부 불만

국감 현장

김경진 "전국 방송통신설비 부적합 판정 46%"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에도 관리 주체인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물론 운영 주체인 통신사 등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8일 "전국 주요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올해 2분기 조사 결과,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의 경우 총 594건 중 273건(약 4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3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강릉이 41건(15%), 광주가 32건(11.7%), 대전이 20건(7.3%), 부산이 16건(5.8%), 대구가 11건(4%)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조사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증액과 함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조사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증액과 함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한기 "日, 독도 영공 침범시 단호 대처"

<합참의장>

국방위 감사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차례 침범했을 경고사격 외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면, 한국에 대한 위협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연수,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 (010-5613-1808)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립니다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